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한농연, 제15기 양곡유통위원회 불참 통보

농림부는 지난 8월 1일 한농연에 새로 구성될 양곡유통위원회에 위원추천을 의뢰하였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제14기 양곡유통위원회의 파행운영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생산자단체 위원을 50%이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양곡유통위원회는 생산자대표 5명(25%), 소비자대표 5명(25%), 학계·연구기관 5명(25%), 언론계 2명·유통분야 3명(2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새로 구성될 15기도 동일하다. 한농연은 작년 양곡유통위원회가 '4~5% 인하'를 결정하여 반농업적인 기구로 전락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사퇴해버리는 파행적인 모습을 더 이상 목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양곡유통위원회의 파행은 위원 구성에서부터의 문제가 크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산자대표가 25%로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농연은 농림부에 요구한 것처럼 생산자대표를 50%이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양곡유통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양곡유통위원 20명 중 19명이 확정되었으며, 한농연만이 불참한 상태이다.

한농연은 양곡유통위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농림부가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양곡유통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4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작년과 같은 반농업적인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 이재덕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울YMCA 토론회 참석

이재덕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일 서울YMCA가 개최한 「붕괴위기의 농촌회생을 위한 범국민적 도농연대국민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WTO 세계농업구조의 변화와 우리농업의 과제”(정명채 농업경제연구원 부원장) “대선 농민정책의 방향과 과제”(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농촌회생 국민운동과 도농연대 유권자운동의 전개방향”(심상용 서울YMCA 시민사업팀장) 등 주제발표와 이재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박응두(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신보연(농업회생연대 사무국장), 염주영(대한매일 논설위원), 이준(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전순은(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명채 부원장은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식량자급을 강화해야 하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 등 논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강화되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윤석원 교수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대선 농민의제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용 팀장은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 운동의 관점에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농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선언 준비모임” 등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국민선언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 (가칭)「위기의 농촌 살리기 국민선언」에 한농연 참여

지난 8월 20일 (가칭) '위기의 농촌 살리기 국민선언' 1차모임을 서울YMCA에서 가졌다. 이번 모임은 그간 농민단체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농업분야를 YMCA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소외되었던 농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국민선언' 활동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번 '국민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먼저 이 모임을 제안했던 서울YMCA를 비롯하여, 한농연, 경실

### (가칭) 21세기 농업·농촌 지키기 국민선언문(안) 요약

농민들은 50년 근대화 정책의 밑거름이 돼 왔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산업을 중시해 농업을 포기하자 는 비교우위론이 대세를 점하고 농업을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도시 근로자 자구의 3/4에 불과한 소득수준에 가구당 2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떠 안고 있지만, WTO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2004년부터는 농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문전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는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업문제를 바라보고 21세기 농업·농촌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첫째,** 우리는 농민의 위상을 국가구성원을 위한 식량 생산·공급자, 국토환경을 지키는 정원사, 문화전통의 보존자, 환경생태계의 파수꾼, 지역개발의 균형자라 규정한다.

**둘째,** 우리는 농민이 당하는 불이익과 국가공동체를 위한 농민의 역할에 합당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21세기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론과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편향된 사회적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민을 중시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우리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농민 생활 기본선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농촌사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섯째,** 우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박탈감과 고통을 나누고 도시에 농심을 배양하는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성찰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 [가칭] 21세기 농민의 사회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민협약 [안]

우리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 도시민 협약서

우리 농업, 우리 땅의 미래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도시민은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생태계 유지 그리고 농민의 사회적 권리 실현을 통해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 ❖ 우리는 우리 농촌, 우리 땅이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식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우리는 반농민적 생활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 아침밥 먹기, 도농 교류활동 참여 등을 통해 우리 농업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
- ❖ 우리는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가격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소비로 농촌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
- ❖ 우리는 우리 사회에 농심을 배양하고 농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 농민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 농민 협약서

농민이 농촌을 버리고 농업을 포기하면 국가공동체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농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국가공동체의 재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 ❖ 우리는 국가공동체를 유지·지속시키는 식량과 국토관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우리는 국가공동체의 지탱과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는 역군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우리는 친환경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국가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청정한 국토의 지킴이로서 녹색 농촌 만들기에 소명의식을 갖는다.
- ❖ 우리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자주적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을 농심배양과 국가구성원들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민들과의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련, 환경운동연합, 전농, 농단협, 농업회생연대, WTO국민연대 등으로 시민·농민단체로서는 굵직한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1차 모임에서는 '국민선언문'과 '국민협약'에 대한 논의를 중점을 두었으며, 각 단체의 내부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협동조합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 방향 세미나」개최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지난 7월 23일 제주대학교 법정대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WTO, 뉴라운드 등으로 밀려드는 개방화 시대에 협동조합의 올바른 운영원칙과 경영방안을 모색하고 조합원과 협동조합간의 하나라는 인식 제고와 위기의 농업구조 개선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한농연 회원을 비롯하여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종수 농협중앙교육위원장과 장종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강연을 맡았다.

### 남해군연합회 남해마늘 대책위원회 발족



▲ 수천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남해군연합회는 한-중 마늘 사기협상 결과 공개와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불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2일 남해 전문대학교 운동장에서 회원과 군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마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국 마늘 수입 자유화 철폐와 개방농정 철폐 등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남해군 마늘대책위원회는 윤백선 설천농협 조합장과 김영희 한여농 남해군연합회장이 공동으로 단독 출범 선언문에서 “남해군 마늘 대책위원회 출

범으로 남해 농업의 희망 찾기는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농업 시장논리 배격 ▶마늘 수입 자유화 철폐 ▶개방농정 철폐를 결의했다.

이번에 발족된 남해군 마늘대책위원회는 신주철 한농연 남해군연합회장, 남해군 이장협의회장, 남해군 농촌지도자연협회장, 남해군 의회의장, 남해군 농협운영협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한농연 남해군 황종병 수석부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하였다.

## 창녕군 8개 농민단체, 8월 23일 창녕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한농연 창녕군연합회 포함 관내 8개 농민단체 참여  
한-중 마늘협상 백지화, 한-칠레 FTA 저지, 쌀 개방 반대 촉구

창녕군 농업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한-중 마늘 협상 백지화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창녕군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8월 23일(금) 오후 2시에 창녕읍 복개천에서 창녕군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창녕군 농업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한중마늘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농연 창녕군연합회 읍면회장단 20여명은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참가 농민들은 본대회 후 외교통상부와 WTO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한나라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현재 “창녕군 농업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한농연 창녕군연합회를 비롯하여 창녕군농민회, 한여농 창녕군연합회, 쌀전업농 등 창녕군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관 2층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창녕군수와 회원조합장, 군의회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마늘산업 희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지역 내 주요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의 마늘산업은, 한-중 마늘 사기협상 결과 공개와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불가 결정 이후 가격폭락과 거래 중단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 창녕군 집회에서 농업을 죽이는 정부를 성토했으며 상복을 입고 투쟁하는 농민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경남 수해지역 - 재해극심지역 지정

정부는 이번 경남의 집중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개면 일대를 지난 8월 20일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피해극심지역으로 뒤늦게 지정하였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김해시 한림면에서는 지난 8월 19일 수해로 인한 생활고를 비판하던 박종근씨가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위한 조치를 보다 빨리 취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번 수해를 지역주민들은 인재로 보고 있다. 함안군의 백산독봉괴주민대책위(위원장 이일섭)는 독을 절개해 다시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산국토관리청장과 감리회사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에는 주민 500여 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방문하였다.

또한 김해시의 한림면재해대책위원회도 면사무소 항의집회를 연 뒤, 22일 주민 500여 명이 상경하여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장순관 공동위원장(한림농협조합장, 한농연 김해시연합회 초대회장)은 '한림배수장 바닥에서 물이 차 올라 펌프 가동이 중단' 된 것이라며 이번 수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 투쟁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해로 경남도는 3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여일 이상 침수가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피해극심지역 지정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경남도 의회 또한 수해지역을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재민들은 제방 부실시공, 하천 준설과 배수장 증설요구 묵살 등의 근거를 들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정부도 전향된 자세를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

##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출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김인호)는 전국적인 조직체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전남도와 제주도의 도연합회 창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성과로 지난 8월 1일 한여농전남도연합회(회장 강순주)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동시에 갖고 도연합회로서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현재 전남도는 13개 시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9개 지역은 창립을 준비하고 있어 도연합회로서 앞으로 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성되지 않은 제주도에서도 9월 중에 창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여농제주도연합회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수자)가 구성되어 있어, 도연합회의 창립이 확실해 보인다.

## 故 신호순, 심미선양 미군장갑차 희생자 49재 처리..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의 49재가 양주군 광적리 효촌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7월 31일 치러졌다. 같은 날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서는 49재를 맞아 규탄집회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49재가 있었다해도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22일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는 경찰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대책위 탄압 중단, 미군책임자 적극적인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는 미군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계속된 저항으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의 근거는 바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른 것이다. 이 소파협정이 1967년 발효 후 약 4만여건, 하루 평균 5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소파는 공무집행 중 범죄 등 3가지만 재판권을 미군이 갖고, 나머지 범죄는 한국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문서에서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해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반미감정 악화를 가볍게 보아서 안될 것이다.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를 앞으로도 원한다면 장갑차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넘어 소파개정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친구는 상하관계가 아닐 것이다. **한농연**

〈한농연 광고〉

###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농연은 2002년 주요핵심 사업으로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대응 활동을 선정하고, 「대선공약 개발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농연이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할 농정공약에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우편 접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우 138-802)
- Tel : (02)3401-3543
- Fax : (02)3401-6549
- Home page : www.kaff.or.kr 자유게시판, 정책제안실
- E-mail : kwak121@chollian.net
- 담당자 : 정책 조정실 임준제 대리